

반환점을 넘은 한일회담, 출발점에 선 그 이후의 한일관계 연구

[서평] 吉澤文寿 編(2019), 『歴史認識から見た戦後日韓関係: 「1965年体制」の歴史学・政治学的考察』, 社会評論社, 336쪽.

신재준*

1. 머리말

지금은 다소 잠잠해진 듯도 하지만, 작년 한 해 우리 사회의 눈과 귀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이슈 가운데 하나는 한일관계의 대립과 긴장 고조였다. 우선 2018년 12월, 동해상에서 벌어졌던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사이의 위협비행-레이더 조준 논란이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국방·안보 갈등으로 비화했다. 갈등은 7월 이후 하반기 들어 경제 영역으로까지 번졌다. 주지하듯 일본정부가 반도체 관련소재 3개 품목의 대한수출을 규제한 게 발단이었다. 이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우대국가, 소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비우호적 조치까지 단행했다.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고시 개정을 통해 대일 전략물자 수출심사 강화로 맞섰고, 최종단계에서 보류되긴 했지만 군사정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강사

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한국에서는 광범한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한일 어느 쪽에서나 반일/협한의 기운이 물씬했다.

이처럼 간략히 열거하기만도 벅찰 정도로 충돌이 격화되었던 것은 직접적으로는 2018년 10~11월에 있었던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판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2000년에 시작되어 근 20년을 끈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피고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을 확정했다. 당시 아베 총리와 고노 외상은 각기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거나 “폭거”,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한 언사로 반발했고, 일본 언론의 논조 또한 대체로 한국 측에 비판적이었다.

본서의 소개말에도 적혀 있듯, 한일관계는 꼬일 대로 꼬여 “전후 최악”이라 할 만큼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빠졌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같은 갈등양상이 영 낯설기만 한 것은 아니다. 외려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던 어딘지 익숙하고 해묵은 광경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것은 문제의 밑바닥에 양국의 식민지 지배·피지배관계를 그저 덮어둔 채 관계를 ‘정상화’한 한일회담·협정과 소위 1965년 체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양국관계의 시계제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소 태평한 듯 보이더라도 ‘1965년’ 전후의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여기서 소개하는 본서의 목적과 취지이자 서평자가 공감하고 서평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1) 평자는 잠정적이지만 적어도 경제면에 관한 한 현대한일관계의 분기를 1865년이라는 단일 시점으로 파악하기보다 1960년대 전체를 하나의 시기로 아울러 조명하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소위 1965년 체제’로 표현한 것은 이 때문이다.

2. 본서의 구성과 내용

본서는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한일회담 및 현대한일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해온 운동가, 역사학·정치학 연구자 10명이 모여 연구회 등을 토대로 만들어낸 저작집이다. 총 10편의 개별적인 논고들은 소위 1965년 체제를 학문적으로 고찰한다는 큰 목표 하에 한일회담과 그 이후 1980년대까지를 분석대상 시기로 하고, 특히 역사인식과 청구권 문제를 주된 소재로 삼았다. 편자에 따르면 본서의 기반이 된 것은 2015년부터 3년간 진행된 일본 과학연구비조성사업 기반연구(B) ‘일한국교정상화 이후의 청구권 및 역사인식 문제의 전개과정 검증’(日韓國交正常化以後の請求權および歴史認識問題の展開過程の検証)이란 연구과제이다. 각 논고는 주제에 따라 크게 3부로 구분된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1부 한일회담 관련 문서의 공개와 한일회담 연구의 새로운 시각 (日韓會談関連外交文書の公開と日韓會談研究の新視点)

1장 한일회담 문서의 개시 청구소송과 재일의 법적지위(日韓會談文書の開示請求訴訟と在日の法的地位) : 이양수(李洋秀)

2장 한일회담과 북한 요인(日韓會談における北朝鮮要因) : 김은정(金恩貞)

3장 한일재산청구권「경제협력」방식의 재고(日韓財産請求權「經濟協力」方式の再考 — 植民地支配正当論、冷戦、經濟開發) : 오타 오사무(太田修)

4장 한일한국교정상화의 원점(日韓國交正常化の原点 — 法的請求權と政治的請求權、そして異次元の經濟協力との併存) : 아사노 토요미(淺野豊美)

2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의 역사인식(日韓国交正常化以後の歴史認識問題)

5장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의 양국 교섭과 역사인식의 외교문제화[日韓国交正常化後の両国交渉と歴史認識の外交問題化 — 「解決済み」後の外交交渉「樺太残留韓国人・朝鮮大学校認可・対日世論」(一九六五~一九七〇年)] : 나가사와 유코(長澤裕子)

6장 가지무라 히데키의 「한일체제」 비판(梶村秀樹の「日韓体制」批判 — 朝鮮史研究者としての同時代への関与) : 야마모토 코쇼(山本興正)

7장 1980년대 한일역사인식 문제(一九八〇年代の日韓歴史認識問題 — 「藤尾発言」をめぐって) : 요시자와 후미토시(吉澤文寿)

3부 「65년 체제」의 역사적 공간(「六五年体制」の歴史的空間)

8장 명칭의 국제정치(名称の国際政治 — 戦争と平和条約そして日韓関係) : 김승배(金崇培)

9장 한일관계와 오키나와 대표 APACL 참가 문제(日韓関係と琉球代表APACL参加問題) : 나리타 치히로(成田千尋)

10장 재일조선인 학생의 「조국」 인식(在日朝鮮人学生の「祖国」認識に関する小考 — 法政大学朝鮮文化研究会機関紙『学之光』を手がかりに) : 김현수(金鉉洙)

먼저 1부에 수록된 4편의 논고는 한일회담문서 공개경위와 현황을 소개하거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일회담을 분석했다. ‘한일회담문서 전면 공개를 촉구하는 모임’(日韓会谈文書・全面公開を求める会)²⁾에 참여하

2) 2005년 12월, 도쿄에서 결성된 단체로 2012년 기준 개인 380명, 단체 70곳이 찬동했다. 10년 여간 일본정부를 상대로 회담문서공개소송을 주도해 일본 외교문서 공개에 큰 역할을 했다. 2016년 해산했지만 여전히 웹페이지가 운영되고 있다.

면서 문서공개 현황 등에 관한 글을 여러 편 썼던 이양수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길게는 약 10년에 걸쳤던 한일 양국의 문서공개운동·소송과정을 정리한 후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재일조선인 법적지위(한국적/조선적) 문제를 논했다. 그의 글을 통해 문서공개과정, 특히 3차에 걸친 일본에서의 소송경위를 자세히 엿볼 수 있다. 1차 소송에서 처음 패소한 의무성이 항소했을 때, 그때까지 늘 항소인석에 앉았던 단체 변호인단과 반대로 항소인석에 앉아본 적이 없던 정부 변호인단이 무의식 중 자리를 바꿔 앉아 재판을 기다렸던 일화 등이 생생하다.

정치학 전공자로 일본학술진흥회 외국인특별연구원원 김은정은 북한 요인을 중심으로 한일회담을 재조명했다. 주지하듯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은 한일관계와 북일관계가 상반된 길, 즉 전자는 긴밀히 접근해간 반면 후자는 후퇴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필자는 북일관계가 한일회담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는 점에 착안해 회담에서 제기되었던 제 논쟁을 북한 요인을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對한반도정책에 얽힌 일본외교의 딜레마를 살펴보고, 향후 대처방안을 전망해보고자 한 것이 문제의식이다. 그에 따르면 한일회담은 북한 요인을 기준으로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1950년대 초, 재북일본인재산이 청구권 문제에 관해 일본정부 내부에서 논쟁을 야기했던 시기, 중반 이후 북한의 적극적인 대일 접근에 따라 한일회담이 정체되었던 시기, 마지막으로 1960년대 들어 일본정부가 한일회담 타결을 우선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시기이다.

별써 20여년 이상 한국현대사 내지 근현대 한일관계사에 천착하고 있는 오타는 식민지배정당론·냉전·경제개발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청구권회담의 소위 경제협력 방식을 재검토했다. 그는 최근 한국 학술지에 청구권협정 ‘해결완료’론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는데, 이 논고도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³⁾ 여기서는 일본정부가 유

3) 오타 오사무(2019), 「한일청구권협정 ‘해결 완료’론 비판」, 『역사비평』 129.

· 무상 5억 달러를 공여한다는 청구권협정의 1조 1항을 ‘경제협력’ 방식, 그것으로 양국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규정한 2조 1항을 ‘상호포기’ 방식으로 규정하고 양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구조와 일본정부 내에서의 정책 확립과정을 통찰력 있게 분석했다.

일본정치외교사·국제관계학 전공자인 아사노는 한일회담 한일외교 문서 자료집⁴⁾ 편찬에 참여하는 등 한일관계 연구에도 적극적이다. 피해자 구제에서 촉발된 작금의 한일관계 갈등 외중에 양국민 상호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면서 ‘국민’을 넘어선 ‘공공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앞서 발표한 글의 연장이다.⁵⁾ 여기서는 오타와 마찬가지로 청구권회담 경제협력 방식을 검토했다. 단 오타가 경험 방식에 내재된 일본정부의 논리와 함의를 추적하는 데 집중했다면 아사노는 일본 정부가 회담에서 그것을 제기하고 관철할 수 있었던 외적 맥락을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해외경제협력체제 정비가 본격화하면서 1961년 연말, 정부 내 대외경제협력심의회가 설치된 것, 그보다 약 반년 앞선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대미 채무인 점령지역행정구조지원조(GARIOA) 처리 대강을 일본에 유리하게 합의한 것 등이 청구권회담의 타결과 밀접히 관련된다.

다음 2부는 큰 틀에서 1965년 이후의 역사인식 문제를 논한 세 편의 논고로 구성된다. 해방 후 일본의 대한정책을 주제로 하여 오타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나가사와는 1965~1970년, 양국 교섭에서 역사 관련 문제가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를 분석했다. 수교 후 한

4) 浅野豊美·吉澤文寿·李東俊·長澤裕子·金鉉洙 등이 편집에 참여한 『日韓國交正常化問題資料』, 東京: 現代史料出版이 그것이다. 이 자료집은 2010년부터 출판을 시작해 2018년 현재 기초자료편 11권, 1기(1945~1953년) 9권, 2기(1953~1961년) 12권, 3기(1961~1963년) 9권, 4기(1963~1965년) 11권이 간행되었다.

5) 아사노 토요미(2015), 「국민감정’과 ‘국민사’의 충돌·봉인·해제의 궤적」(이원덕 외 공저, 『한일관계사 1965-2015』 1(정치), 역사공간. 일부 내용은 서로 중복된다.

국정부는 사할린 잔류 한국인들의 귀환 문제나 총련 계열의 조선대학 인가 문제를 적극 제기했고, 북일관계 접근(무역규모 증대)에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양국의 의견 대립이 뚜렷한 쟁점들은 각료회의와 같은 공식석상에서 정식으로 논의하길 거부했다. 또 한일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자국의 대한경제협력을 통해 대일감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낙관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한국정부·사회의 대응과 태도이다. 정부는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여론을 통제했고, 야당이나 언론·시민운동 역시 경제 우선 또는 대북체제경쟁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요컨대 피해자 구제와 같은 문제의식이 결여되었던 것이다.

김희로 사건을 포함해 재일조선인 민족 문제에 관한 여러 편의 글을 썼던 야마모토는 일본의 ‘조선근현대사’ 연구자로 잘 알려진 가지무라(梶村秀樹)의 한일관계·체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검토했다.⁶⁾ 민중이 주체가 되는 ‘조선사’를 추구했던 가지무라의 생애와 그의 학술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다.⁷⁾ 필자는 선행 연구들이 가지무라 한일체제론의 핵심 요소인 분단체제 비판의 측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일본인의 책임을 논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1965년 이전 소위 한일투쟁기와 이후 한일체제기, 그의 인식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그가 남한 민중의 민족주의를 곧 사회주의로 등치했던 투쟁기의 인식에서 점차 정권과 민중이 서로 다투는 복잡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파악해갔다는 점,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구조 안에 있다는 점에서 일본인의 책임을 중시했고 특히 일상에서의 사상·감성의 변혁·책임을 강조한 것은 재일조선인 차별철폐운동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6) 이 논고는 야마모토 코쇼(2017), 「‘한일체제’와 가지무라 히데키」, 『한일민족문제 연구』 33을 저본으로 수정·가필한 것이다.

7) 예컨대 최근의 연구로 강원봉·戶邊秀明·三ツ井崇·조관자·차승기·홍종욱(2014), 『가지무라 히데키의 내재적 발전론을 다시 읽는다』, 아연 참고.

본서의 편자이기도 한 요시자와는 오타와 더불어 한일회담에 관한 양국 외교문서를 가장 충실히 검토하고 이를 연구에 반영하고 있는 연구자 중에 한 명이다. 여기서는 수록된 논고 중 시기적으로 가장 뒤에 해당하는 1980년대 양국의 역사인식 문제를 다뤘다. 구체적인 소재는 1986년 당시 후지오(藤尾正行) 문부대신의 두 차례 망언이다.⁸⁾ 그의 발언은 중국·한국 등 근린제국의 강한 비판을 받아 외교문제로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문제가 되어 총리로부터 파면된 유일한 사례이기도 하다. 필자는 이 발언의 문맥을 일본과 근린제국 간에 역사인식 문제가 정치문제로 부상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한일 외교문서를 통해 파면에 이른 경위 및 그에 대한 일본 국내외 반응 등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마지막 3부도 세 편의 논고로 구성되었다. 정치학 전공자인 김승배는 명칭이 특정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설명력을 제공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라는 지역명칭, 대한제국부터 임시정부와 대한민국까지 국가명칭에 포함된 ‘대한’(大韓), 강화조약 2조(a)에 명기된 ‘코리아’(Korea),⁹⁾ 각 명칭에 내재된 국제정치 역학관계 또는 함의를 살펴보았다.¹⁰⁾ 그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는 강화조약을 ‘화해의 강화’로 하고자 했던 미국의 의사가 반영된 장소이자 상징이었으며, 일본이 병합 직후 한국 국호를 조선으로 고쳤음에도 임시정부와 대한민국까지 ‘대한’

8) 그는 1986년 7월, 대신 취임 직후 고교 일본사교과서(신편 일본사)에 대한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불평하는 자는 세계사에서 그 같은 일이 없었는지 생각해보라”고 답했고, 『文藝春秋』 10월호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언급하던 가운데 특히 조선 식민지화는 당시 대한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9) 일본어판에서는 ‘조선’(朝鮮). 강화조약 2조(a)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과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0) 이 논고는 김승배(2017), 「명칭의 국제정치학」, 『한국정치학회보』 51(2)를 수정한 것이다. 한국에서 출판된 다른 단행본에도 수록되어 있다[김영배 외 공저(2019), 『한일관계의 긴장과 화해』, 보고서].

이 이어지고 있는 데서는 한국의 주권인식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일본은 강화조약에서 ‘조선’에 대한 권리·권원의 포기과 ‘한국’ 독립 승인을 구분하고자 했지만 조문의 ‘코리아’는 ‘대한민국’이 아닌 ‘한반도’였다. 필자는 이것을 강화조약을 통해 한국의 독립이 인정된 것이 아닌, 오히려 주권을 회복한 일본이 다른 국가를 인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했다.

일본학술진흥회 특별연구원인 나리타는 1954년에 창설된 민간반공기구로서 실제로는 한국과 중화민국이 깊이 관여한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에 오키나와 대표가 참가하게 된 경위 및 그것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인식을 검토했다.¹¹⁾ 특히 오키나와 출신으로 중화민국에서 활동했던 채장(蔡璋)과 그가 이끈 류큐혁명동지회를 주목해 한일관계 변화가 오키나와 대표의 APACL 참가에 미친 영향, 오키나와 귀속 문제에 대한 각국의 대응 등을 추적했다. 1960년대 후반 오키나와 반환 문제에 대한 한중 양국 관여의 전사로 읽을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며, 동시에 한중 일과 미국의 상호관계가 맞물리는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일조선인과 한일회담 반대운동 등을 주로 연구해온 김현수는 호세이대 조선문화연구회 기관지였던 『학지광』을 사료로 하여 총련계 학생들의 ‘조국’ 인식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민단계 대학생 잡지를 분석한 선행 연구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다.¹²⁾ 필자에 따르면 1960년 전후 좌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조국으로 인식했고, 강한 신뢰감을 표명했다. 남한 이승만 정권에 대해서는 격한 혐오감을 가졌으며, 군사정부 역시 배격했다. 그렇지만 1956년 ‘8월 전원회의 사건’을 거치며

11) 이 논고는 2018년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서 주관한 학술대회 발표문을 토대로 한 논문 나리타 치히로(2019), 「오키나와 귀속 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중화민국 정부의 동향」, 『인문논총』 76(2)와 일부 중복된다.

12) 鄭雅英(2008), 「在日韓国人学生の1960年代 — 早大韓文研『高麗』をよみながら」, 『戦争と平和』, 大阪 : 大阪国際平和研究所紀要.

북한체제가 다원성을 상실하고 점차 경직되면서 그 여파가 재일조선인 사회에 미친 1960년대 이후에는 학생들의 북한에 대한 신뢰감에도 동요가 나타나게 된다.

3. 본서의 의의와 과제

이상 10편의 논고는 주제는 제각기 다르지만 ‘1965년 체제’를 둘러싼 한일 역사·역사인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머리말에서도 언급했듯, 작금의 한일관계 갈등의 밑바닥에는 한일회담·협정과 그것을 바탕으로 전개된 역사가 있다. 그것을 덮고서는 양국관계를 지속적인 우호협력의 궤도에 올리기 어렵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주기적인 이탈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점에서 역사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되짚어보려는 시도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더는 미뤄서는 안 될 시의성을 가진 노력의 표현이기도 하다. 때문에 평자는 본서의 존재 만으로도 반갑다.

더욱 본서는 편자가 언급한 대로 한일회담 및 현대한일관계 선행 연구들을 넘어서려는 의욕적인 논고들로 채워졌다. 각기 주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선행 연구를 보완하고,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고자 애쓴 논고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1960~1970년대 한일관계 연구에 관심이 있는 평자로서는 본서가 한편으로는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듯해 고마움과 함께 자극도 된다.

본서가 갖는 힘은 무엇보다 한일회담·관계 관련 최근 공개된 사료들을 충실히 반영·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한일회담 논고의 경우 일본정부 문서들의 활용이 두드러진다. 1부에 수록된 김은정, 오타, 아사노의 글이 그러하며 가장 앞에 한일 양국의 자료공개 현황을 정리한 이양

수의 글이 실린 것도 상징적이다.

주지하듯 2005년에 회담문서를 전면 공개한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는 그 과정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여러 차례에 걸친 분할 공개로 더뎠고, 그나마 부분 또는 비공개 문서가 많았다. 따라서 2000년대 이후 초기에는 한국 문서가 연구를 주도한 밑거름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는 사이 순차적으로 공개된 약 6만여 장의 일본 문서는 일본에서는 물론 한국에서도 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¹³⁾ 여러 논고들은 2010년대 이후 조금씩 폭을 넓혀온 학계의 일본 문서 활용도가 완숙기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자료 구사의 확대가 단지 한일 문서의 교차 확인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기존 인식·이해의 심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오타는 「対韓經濟技術協力に関する予算措置について」(1960. 7. 22)란 외무성 문건을 인용했다. 문건의 존재 자체와 내용 일부는 1992년 NHK 방송을 통해 이미 알려졌지만 전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은 필자가 규슈대학 도서관의 모리타(森田芳夫) 문고 등에서 새롭게 발굴하면서였다. 이를 통해 그는 일본정부 내에서 청구권 문제에 대한 경제협력 방식이 최초로 제기되고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시기를 1960년 7월 이후로 명확히 특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일본정부의 정책 결정의 맥락을 더 다양한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자료 확대 덕분이다. 경제협력 방식의 등장 배경에 대해 그간에는 주로 미국 대외정책의 변화와 한일수교 압력, 비슷한 시기 한일 양국에서 경제를 중시한 정권의 등장, 1950년대 동남아 각국에 대한 일본의 배상 처리 경험 등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여기에 오타는 이 시기 프랑스 등 구 제국주의국가들이 피식민지국가의 독립을 인정하고 경제협력을 하는 형태로 식민지 지배 책임을 덮었던 방

13)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동북아역사재단 편(2010), 『韓日會談 日本外交文書』, 1-103.

식을 일본정부가 주시하고 공유했음을 지적했다. 아사노는 GARIOA 채무변제와 같은 구체적 이슈를 들어 대외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미일의 협의·협조양상을 논했다.

물론 조금 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아사노는 미국의 GARIOA 대일원조 상환액 감면을 미일 양국이 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으로 해결하는 것에 합의한 반대급부와 같이 서술했다. 그러나 상호관계는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가 활용한 자료로는 일본의 ‘대외’경험 확대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명시적으로 ‘대한’경험을 가리키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 얼핏 당연하지만 청구권 문제의 해결방식은 결국 한일회담에서 결정된 것이란 사실을 감안할 때, 미일이 이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협의했는지 또 그 영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은 아직 숙고할 여지가 있는 듯하다.

한편 한일관계 논고의 경우 양국에서 생산시기의 경과에 따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부문서들을 적극 활용한 것이 눈에 띈다. 2부에 수록된 나가사와와 요시자와, 3부 나리타의 글이 그렇다. 기실 현대한일관계에서도 1965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한일회담과 비교해 상대적으로는 물론 절대적으로도 충분치 않은 편이다.¹⁴⁾ 자연 양국의 외교사료관 등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개되는 공문서들은 중요한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활용도가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글들에서 우선 양국의 각급 공문서관 조사 필요성과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다.

특히 수교 이후의 양국 역사·역사인식 문제를 다룬 나가사와와 요시자와의 글은 소위 1965년 체제 또는 “광의의 ‘역사 문제’”를 검토한다는 본서의 큰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평자는 현재 한일관계 위기의 근저에 한일협정이 있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사를 해결하지

14) 이 점에서 주제에 따라 다른 자료를 토대로 한 아마모토와 김승배, 김현수의 글도 당연히 중요하다.

못한 채 봉합해버린 한일협정의 후폭풍은 이미 당대에도 불어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한계를 안았던 ‘1965년 체제’의 불안정성, 당대 한일 나아가 한미일관계의 불협화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들의 글에 공감할 수 있다.

단 나가사와의 글에서 한 가지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한일무역 또는 한국경제구조는 그가 말하는 역사 문제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그는 수교 후 한국 정부·사회의 대일 문제제기가 경제나 북한 견제에 집중된 것을 비판적으로 보았다. 반면 사할린 잔류 한국인 귀환 문제는 일본정부의 거부로 의제화하지 못했고, 한일협정 자체에 대한 또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문제제기는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의 지적처럼 당시 일본군‘위안부’ 또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문제제기와 그것을 통한 양국의 논의과정이 결여되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수직적·종속적이라고 비판 받았던 한일무역구조와 수출입 불균형은 한국정부가 청구권 문제를 경험 방식으로 해결하는 한편으로 요구했던 호혜균형 경험이 거부된, 한국으로서는 좌절의 결과였다. ‘협력’의 비대칭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1965년 체제’의 불완전성 또는 그 안에서 양국의 불협화음과 밀접히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불완전한 한일협정에서 파생된 ‘역사 문제’의 범주를 보다 유연하게 확장한다면 ‘체제’의 속성·성격을 더 풍부히 이해하는 데 외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4. 맺음말

평자는 일본에서 간행된 한일회담문서 자료집(주4)을 보고 적지 않게 놀랐던 적이 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 모음집이 아닌, 한일 양국의 문서들을 일일이 대조해 재분류하고 심지어 한국 문서들은 일본어로 번역가

지 한 자료집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스쳤지만 그보다는 일본 학계와 연구자들의 꼼꼼함과 치밀함이 더 오래 마음에 남았다.

본서의 필자들은 거의 대개 일본학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 대한한일 관계에 관해 왕성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연구자들이다.¹⁵⁾ 본서와 각 필자들의 연구를 통해 해당 분야 일본학계가 어디에 있는지 대체로 가늠할 수 있다. 자료집과 본서로 미루어보건대 앞으로도 좋은 연구들이 계속 나올 듯하다.

다만 1965년을 분기로 그 이전의 한일회담과 이후의 한일관계 연구가 처한 상황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일회담은 한국문서를 토대로 이미 한바탕 연구가 진행되었고, 지금은 그것을 넘어 일본문서를 추가·교차 검토하는 데까지 왔다. 연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종점이 있다면 반환점은 넘지 않았을까 싶다. 이제는 한미일 삼국의 국내적 배경과 회담에 대한 입장, 상호교섭 등을 입체적으로 정리해야 할 단계이다. 반면 이후의 한일관계는 아직은 출발점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개별 소재에 대한 연구를 축적해 시기적으로 1965년 이후 70년대, 나아가 냉전기 전 기간을 아우르고 ‘1965년 체제’의 국내외적 작동양상과 성격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이것은 평자도 같이 짊어지고자 하는 과제이자 목표이다.

15) 작년과 재작년에도 두 편의 단행본이 나왔다. 金恩貞(2018), 『日韓國交正常化交渉の政治史』, 東京: 千倉書房; 요시자와 후미토시·이현주 역(2019), 『현대 한일 문제의 기원』, 일조각.